혁신도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 는다

토공, 공동도급 비율 30%로·참여액 222억까지 올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나주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조건이 확대됨으로써 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혁신도시 건설 물량의 절반을 지역 건설업계에 우선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역업체의 참여 폭이 더 늘어나게 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8일 전남도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도급 수주액과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3배 가량 확대하는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도급 참여액이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액(74억)에서 국가사업(222억)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 등지의 대형 건설업체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에서 토공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가격 50억~222억원)를 수주할 때 반드시 해당지역의 건설업체를 끼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도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외지 업체가 지역건설공사를 벌일 경우 예정공사 금액의 3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하는 것으로, 도내 업체들의 참여비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발주때 낙찰자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도 기존 설계금액의 95~100%에서 97.5~102.5%로 폭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낙찰금액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공사품질 및 도급업체의 재무상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일각에서 혁신도시 건설물량의 절반을 지역 건설업계에 우선 발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참여폭이 더 늘어날지 여부도 관심이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서재관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계로의 의무 발주를 골자로 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비의 50%를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발주하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또 토공이 실시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모든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어서 법 개정 여부에 건설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서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며 "지방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특별규정이 제대로 효력을 갖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혁신도시에 토지보상액 얼마나 풀리나

혁신도시	추정 토지보상액(원)	2006년 땅값 상승률(%)
대구	1조200억	대구 동구 6.48
전주	8,358억	1.82
나주	6,390억	9.86
원주	4,193억	5.86
울산	3,800억	2.32
진천·음성	3,527억	진천 12.3, 음성 12.12
김천	3,200억	8.03
진주	2,761억	3.73
제주	1,140억	1.86
계	4조3,569억	6.44

*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달라질 수 있음 〈자료:건설교통부〉

부동산 시장에 '돈폭탄'?

나주 등 혁신도시 9곳 보상
내달부터 4조 3,000억 풀려

다음달부터 공기업 등이 이전하는 전국의 혁신도시 9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 4조3000억원대의 보상금이 풀린다.

6곳의 기업도시, 6월에 발표되는 분당급 신도시, 400만 평의 기존 신도시 확장 등을 통해서도 엄청난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토지보상금이란 뇌관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전북 전주·완주(280만 평), 대구 신서(127만 평), 울산 우정(85만 평), 제주 서귀포(35만 평), 부산 동삼·문현·센텀지구(24만 평)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지정 완료된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을 포함해 전국의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대구·울산 등 절차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직장인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소득증가분 만큼… 이달부터 추가 징수키로

직장인들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로 평균 9만8천여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작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일 "직장인(922만명)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 말고도 추가로 작년도 소득을 정산한 보험료 9천54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 보험료로 직장인 1인당 평균 9만8천여원씩이다.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오른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추가 징수분이 30만~4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징수액은 작년 8천9억원에 비해 1천45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보수가 작년에 많이 오르고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게 되는데,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연말정산이 끝난 뒤인 이듬해 4월마다 전년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이처럼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의 실제 인상률은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말농장 개장 농협 고객 가족들이 지난 7일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가 개장한 광주시 북구 장등동 '해피팜' 직영 주말농장에서 정성스레 모종을 심고 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기술 혁신 지원 대상 업체
한남세라믹 등 20곳 확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의 대상 업체를 최근 확정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는 40개 신청기업 가운데 (주)한남세라믹의 '석고몰드를 이용한 지르코니아의 성형성 개선 및 성형방법 개발' 등 20개 기업의 신청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노비즈기업은 올해 말까지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비용, 연구용품 구입비용, 기술정보 활용비용,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소·대학 등 기술전문기관 출장비, 기술전문가·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기타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등을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타이어 제조 원료도 가격 담합

금호석유화학·씨텍 57억 과징금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옛 현대석유화학)이 3년 동안 타이어 제조원료인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간 타이어 업체에 합성고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6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석유화학이 50억2천800만원, 씨텍은 6억5천200만원이며 공소시효(3년)가 지나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2개사는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총 수요물량의 68.7%(2002년 기준), 씨텍은 22.2%를 공급함으로써 양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들 2개사가 판매한 제품이 중간재여서 담합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은 추산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담합기간 관련제품 매출액은 3천87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개사는 2000년 3월 이후 합성고무 제품중 SBR(Styrene Butadiene Rubber)과 BR(Butadiene Rubber)의 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면서 영업실무자들이 시내 음식점 등에서 만나 목표인상가격을 정하고 타이어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해왔다. /연합뉴스

고질체납자 47명 추적… 100억 추징

광주 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2006년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47명에 대해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광주국세청의 체납처분 유형별 실적은 현금징수 7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3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17억원, 2005년 216억원, 2006년 103억원이었다.

전국 체납처분 징수액은 1천117명, 2천720억원에 달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광주청 2개팀 4명, 14개 세무서 68명으로 체납추적전담팀을 구성해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추적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최고 40% 가산세

호남 신고대상자 8만7,000명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할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8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3만8천명, 일반 개인사업자는 4만9천명이었다. 신고분은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이 해당된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특히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규정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환급 혐의자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 및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